

영남편중 인사-검찰 대화록 수사 결과-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3대 쟁점싸고 한치 양보없는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다.

닷새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첫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영남 인사 편중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현안들을 놓고 양보 없는 대결을 펼쳤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방한 중국 회화회장을 찾은 알파즈백 아랍 바예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과 정화를 반복하며 파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영남 인사 편중=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이 맘 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정치채신안을 발표하며 ‘국민대통합의 탕평인사로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권력기관에 특정 지역 편중인사는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최근 단행된 인사를 보면 감사원장, 검찰총장 모두 특정지역 출신”이라며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 등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들도 모두 특정지역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합인사가 아닌 대분열·영남인사라고들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박근혜정

부의 장차관급 인사 총 195명 중 영남 출신은 전체의 35%인 69명이며, 69명 중 부산·경남(PK) 출신이 39명(20%)으로 대구·경북(TK) 출신 30명(15.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장은 전체 65명 중 42%인 27명이 영남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 결과=“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요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화록 원본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의도적인 삭제로 드러났다”며 “조선시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거짓말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왜 노(전)대통령이 NLL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이제 국민도 거의 안다. 그 진실

은 박 대통령이 오해했던 것처럼 영토평화가 아니고 평화구상이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까지 보냈는데 무슨 실종시킬 의도가 있었겠냐”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특검=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분열을 조장하는 대선불복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에 대선개입을 요청한 바 없다.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지금 정권에 연계해 매도하는 것은 대선패배의 분풀이”라며 “특검 주장은 ‘신 아합연대’의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민은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로 얼룩진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기정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 강력하게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충돌’ 문제 파행...정회·퇴장·사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전날 발생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지원요원 간 충돌 문제 때문에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하기도 했다.

우선 ‘특위-특검’을 한 묶음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특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다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위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이 같은 대립 속에 대정부질문도 삐걱거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전날 청와대 경호지원요원과 충돌 문제로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로 인해 대정부질문은 예정 시각을

1시간 이상 넘겨 시작했다. 강 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청와대에 대해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잇단 의사진행발언으로 ‘설전’이 시작되면서 본회의는 개의 1시간 만에 정회 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경호팀 구성원이 차량에서 무조건 뛰어내려 강 의원의 앞목을 치고 뒷덜미를 잡고 끌었음에도 청와대 경호실은 강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면서 “여야를 뛰어넘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가한 폭력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강 의원이 순경의 목살을 잡고 구타한 것 아니냐”며 “경호실 운전담당 순경은 차를 미쳐 빠져 못한 상태에서 강 의원이 차량을 발로 2~3차례 차니까 항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의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소리쳤으며 일부 의원들은 발언대 앞까지 나와 항의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장이 “발언을 잠깐 중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발언을 계속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표

시로 단체 퇴장했다. 이에 강 의장은 오후 3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곧이어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소집,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 동료의원을 폭행범으로 몰아붙였다”고 성토하며 새누리당의 사과 없이는 대정부질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새누리당 측이 이 요구를 수용, 대정부질문은 중단 2시간여 만에 속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국회 경내에서 일어난 강 의원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본회의가 정회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박승춘 보훈처장

민주,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민주당은 19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은 황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 사유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하려 했으며 검찰의 구속 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황 법무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임과 관련해 한 언론사의 보도만 가지고서 감찰지시를 내려 검찰청의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는 등 정치간여 행위를 벌인 것이 해임촉구 사유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남 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를 부인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으며 대선개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납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해임 및 해임촉구 건의안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오병윤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즉각 철회해야”

통합 진보당(이하 진보당) 오병윤(사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비교섭단체인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진보당을 희생양 삼아 야권연대를 무너뜨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나아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떤 논리적 적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도 발견할 수 없다”며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도 “틀도 보도 못한 ‘RO(혁명조직)’, 정부는 명칭, 결성 시기, 조직 구성 어떤 것도 못 밝혔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소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5·12 강연’ 녹취록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이 272곳을 수정에 다시 범위에 제출한 사실을 근거로 RO사건은 “악의적 왜곡과 날조”라며 이 의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 ‘강기정 의원 폭행’ 청와대 사과 요구

민주당은 19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회 본관 앞에서 빗어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과 청와대 경호 지원요원 간 충돌사태에 대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을 ‘청와대 경호(지원요)원에 의한 국회의원 폭행’으로 규정, “청와대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떠났음에도 (국회 본관 앞) ‘차벽’이 제거되지 않아 강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량을 살짝 차는데, 이는 재물손괴나 폭행 어떤 것도 안 된다”며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지원요)원이 강 의원의 뒷덜미와 허리를 잡고, 또 다른 경호원은 팔을 끼는 상황이라 3분 가량 지속됐다.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급매”

14평-2세대 (14,16층)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무등산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1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5000만원 정도
- 매매가 - 3300만원

29평-3세대 (10,12,13층)

- 주거 및 사무실 겸용
- 광주공원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2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1억원 정도
- 매매가 - 6500만원

53평-2세대 (9,13층)

- 사무실 전용 (창가 코너, 전망 좋음)
- 광주공원과 양동시장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3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2억 1천만원 정도
- 매매가 - 1억 3500만원

77평-2세대 (20층)

- 사무실 전용 (최상층, 전망 최고)
- 광주공원과 양동시장 쪽 바라봄
- 전용면적 60%, 내부 올 수리
- 관리비 평당 6500원 선
- 대형 주차장 완비 (5대 무료)
- 개별 냉,난방기 완비
- 시세/ 분양가 - 3억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2억 7천만원

회사 사정상 싸게 정리합니다. 문의 H. 010-4667-9300